

“文대통령, 등록금 반환 결단”...대학생들, 靑 향해 삼보일배

빗줄기 속에 우비 입고 거리로 나선 대학생들

“지난해 촬영 강의 재사용...대학생활 잃어버려”

“대학교 교육부 외면 지속...등록금 반환 절실”

전국대학학생회네트워크(전대넷) 등 청년·대학생단체가 모인 '2021 등록금반환운동본부'는 28일 문재인 대통령과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향해 대학 등록금 반환 결단을 촉구했다.

공역부터 시작해 청와대 앞 청운효자 동주민센터까지 1시간여 동안 대학 등록금 반환 및 대학생 등록금 부담 경감을 위한 삼보일배 행진을 진행했다.

빗줄기 속 우비를 입고 거리로 나선 이들은 “올해 대학에서는 학생들의

분노가 가득하다”며 “지난해 촬영 강의 동영상 올해도 그대로 재사용하고 있다. 또 코로나19로 신입생 생활도 없어진 코로나 학비가 됐다”고 주장했다.

전대넷에 따르면 지난 2일부터 현재까지 등록금반환운동본부가 진행하고 있는 '2021 등록금 반환 및 대학생 등록금 부담 완화 서명운동'에 대학생 1만2000명 이상이 서명했다.

이들은 “여전히 전국 대학 중 96%가 넘는 대학은 학생들의 외침을 외면하고 있다”며 “잃어버린 대학생활, 취업난, 학자금 대출, 교육권 침해, 생활고까지 대학교 교육부의 외면이 계속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님, 유 장관님 대학생들의 외침을 외면하지 말아 달라”며 “대학생들은 그 어느때보다 등록금 반환이 절실하다”고 거듭 촉구했다.

정수빈 서울여대 등록금반환운동본부 본부장은 “등록금 반환 문제는 대학생들에게 물리칠 수 없는 문제”라며 “단순히 때 쓰는 게 아니라 생존에 직결된 문제이기 때문에 절실하게 요구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이날 진행된 삼보일배는 코로나19 방역 수칙에 따라 14명이 2개 조로 나눠 진행했다. 서선욱기자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에 출입 통제되는 서강대 28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강대학교 정문에 학교 출입 통제 안내문이 게시되어 있다. 서강대학교에 따르면 본자가 국제학사 입학생 1명이 지난 25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으며 이에 내달 9일까지 모든 대면수업을 비대면으로 전환한다고 밝혔다.

“제대 후 복학할려니 전공학과 사라져...꿈 버려야 하나요”

학과 통폐합으로 학생 모집 중지돼 ‘복학 불허’

전남의 한 대학 복학 준비생이 군 복무 기간 자신의 전공학과가 사라져 복학을 고민해야 하는 황당함이 일어났다.

대학 측은 학과 통폐합으로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이지만 복학생은 오랜 꿈을 버려야 하는 갈림길에 놓였다.

전남 A대학 복학 준비생 K(25)씨는 최근 군을 제대하고 복학을 신청했으나 자신이 다니던 안경광학과의 모집이 중지됐다는 통보를 받았다.

학칙상 재학생이 없을 경우 해당 학과에 복학할 수 없어 다른 학과로 전과를 하거나 안경사가 되기 위해서는 자퇴하고 다른 학교로 편입해야 하는 상황에 처했다.

이 대학은 지난 2016년 학령인구 감소 등의 여파로 학과 통폐합을 단행했다. 이 과정에서 K씨가 다니던 안경광학과는 학생 모집이 중단되면서 현재 재학생이 없다.

가정형편이 어려워 한차례 휴학한 뒤 2학년을 겨우 마치고 2019년 8월 군에 입대한 K씨는 안경사가 되기 위해 이 대학에 진학했고, 그 꿈은 버릴 수 없는 미래였다.

안경광학과를 졸업할 경우 안경사 시험을 치를 수 자격이 부여되지만 현재 이 대학에서 K씨는 자신의 진로를 찾아가기가 힘들게 됐다.

K씨는 28일 “입학 당시 안경사로서의 취직을 목표로 삼았고, 좋은 교수

님을 만나 그 꿈을 키웠다”면서 “휴학과 군복무 등으로 공백은 있었지만 그 꿈을 아직 버리지 않고 복학하려는데 안된다니 참담하고 억울하다”고 말했다.

K씨는 지난 22일 교육부에 청원을 했으나 학교 측으로부터 복학 불허를 연락받고, 26일에는 청와대 국민청원에 글을 올렸다.

대학 측은 “학과 통폐합으로 인한 피해가 학생에게 가지 않도록 노력했다”면서 “학과 통폐합에 따른 부득이한 상황으로 전과 등을 유도했으나 좋은 결과를 찾지 못해 안타깝다”고 말했다.

오유나기자

‘봄꽃 행락객 증가’ 전남 대중교통 코로나 방역 강화

다중이용시설 62곳·대중교통수단 700여대 점검

전남도는 꽃놀이철을 맞아 관광객 증가에 대비해 대중교통 분야 코로나19 방역활동을 강화한다고 28일 밝혔다.

29일부터 5일 간 교통시설 코로나19 방역 점검을 한다. 점검 대상은 목포, 여수 등 22개 시·군의 교통 관련 다중이용시설 62개소와 대중교통수단 700여 대다.

다중이용시설은 터미널, 기차역, 택배 분야 물류창고, 콜센터가 해당하

며, 대중교통수단은 버스·택시·전세버스·기차역의 경우 승·하차객 동선이 겹치지 않도록 분리 운영되는지를 점검한다.

박철원 전남도 도로교통과장은 “최근 날씨가 따뜻해져 봄철 행락객 인파가 늘어나는 만큼 순간적인 방심으로 다시 코로나19 확산을 불러올 수 있다”며 “즐거운 봄맞이 가운데서도 도민과 관광객이 방역수칙을 잘 지켜 감소세가 지속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정환기자

중점 점검 사항은 방역수칙 홍보와 준수 여부다. 코로나19 지역 확산세가 수그러들며 전남권 확진자 숫자가 한 자릿수를 오가는 만큼 일상생활의 방역 해이가 우려되고 있다.

이에 따라 차량 내 음식물 섭취 금지, 터미널·차량 손소독제 등 방역물

“전남도립국악단 민영화 이유로 직장 내 갑질 중단” 촉구

공공운수노조 광주전남지부는 28일 “전남도립국악단이 단원들에게 서약서 등을 강요하고 민영화 추진 이유로 해고를 예고했다”며 “당장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단체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전남도립국악단 내 문화예술노동자들에게 시대착오적인 서약서 강요와 직장 내 괴롭힘, 해고 협박 등 ‘직장 내 괴롭힘’이 가해지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도민들을 위해 공연을 해야 하는 문화예술노동자들에게 국

악단을 ‘민영화(법인화)’ 하겠다고 밝히며 창단 36년만에 처음으로 오는 31일자로 상임단원에 대한 해촉(해고)예고를 한 상황이다”며 “고함 치며 사직서 제출을 종용하는 발언도 서슴치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타 기관의 사례를 들며 민영화에 동의하지 않은 단원들에게는 섬으로 발령을 보내거나 공연이 아닌 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등 불안을 조장하고 있다”며 “양심의 자유를 스스로 포기하는 것과 같은 ‘서약

서·확인서’ 작성도 강요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전남도립국악단은 지방문화예술 활동을 권장·보호하고 남도국악의 계승과 문화 창조를 위해 1986년 창단됐으며 80여명의 상임단원이 활동하고 있다”며 “도민을 위해 활동을 하고 있는 단체에 가해지고 있는 인권유린 행태는 중단돼야 한다”고 요구했다.

단체는 29일 오전 전남도청 앞에서 ‘직장 내 괴롭힘’ 중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다.

신문인쇄 전문기업 (주)남도프린테크

(주)남도프린테크는 신문사 법인설립, 신문발행업 등록, 편집, 인쇄까지 토탈 서비스 가능한 업체입니다.
 믿고 맡겨주시면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광주·전남 최초로 신문윤전판 출력시스템 도입
- 월등한 색상 구현력에 더러움 현상은 최소화!
- 최상의 인쇄 품질로 고객 만족을 실현하겠습니다

(주)남도프린테크
 광주광역시 광산구 평동로803번안길 93-10(용동) 평동산단 3번도로 끝
 Tel : 062)943-0135~6 Fax : 062)943-0134 담당자 : 010-2656-4747(장상문 전무)